

마이데이터+헬스케어... 보험사, 미래 먹거리 발굴 '분주'

교보생명·신한생명·KB손보 등 업계 첫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데이터 기반 신산업 융합 촉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도 강화

생명·손해보험사를 막론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보험영업손실을 메꾸고, 장기적인 보험사의 수익 창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보, 메리츠화재 등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 2차 사업자 허가를 신청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 정보를 한데 모아 통합 관리하고, 고객별 맞춤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보험사들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한 번에 파악해 더 적합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헬스케어·마이데이터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 내정자가 15일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주요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신한생명

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신한생명의 경우 마이데이터와 헬스케어를 접목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한생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에 의료 분야 실증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신한생명은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의료 분야에 참여해 개인의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추천 등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통해 보

험 가입 절차 간소화도 나선다. 개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해서다. 계약 심사 과정 중 고객이 겪는 불편함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생명은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인 '하우핏(HowFIT)'과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헬스케어 콘텐츠인 '마이바디(My Body)' 등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 신한라이프로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영역 개발을 위해 신한생명은 관련 사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15일 신한라이프 기자간담회에서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신한라이



유투이미지

프는 디지털과 헬스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앞으로 1,2년 이내에 디지털과 헬스케어 산업 부문에서 일류가 될 것"이라며 "최근 헬스케어 플랫폼 '하우핏'을 런칭했다. 이를 보험서비스와 연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민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KB손보는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도 검토하며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KB손보는 지난해 9월 보험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에 대한 부수업무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지만 최근 보험법 개정에 따라 나뉘

사 차원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해 준비해오던 것을 검토해 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미래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데는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보험영업손실을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생보사 15곳과 손보사 11곳의 총 보험영업손실은 6조99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의 보험영업손익은 ▲2018년 -5조3498억원 ▲2019년 -12조696억원으로 적자 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로 벌어들인 수익보다 보험영업에 지출한 비용이 더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때문에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 판매를 뛰어넘어 장기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와 헬스케어를 연계한 서비스를 통해 보험업계의 새로운 주력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병자·고령자 상품의 체계적인 개발이 기대된다"며 "초반에 얼마나 데이터를 구축하는지 등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성패를 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dus0248@metroseoul.co.kr

내년 3대 핵심산업 등 R&D에 23.5조 투자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확정 바이오·전기차·반도체 등 2.4조 소부장 분야 생태계 강화 2.2조 등

정부는 내년에 주요 연구·개발(R&D)에 올해 22조 5000억원 대비 4.6% 증가한 23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 완수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투자에 중점을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 24일 개최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R&D 예산은 올해 대비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2020년 18%, 2021년 13%에 비해 낮았는데, 기재부 예산심의 단계나 국회위 단계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중점 증가한 분야는 디지털 전환이 44%로 가장 높고, 시스템반도체, 양자기술, 6G 등 기술패권 대응 전략기술 분야 예산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 대비 11.5% 증가한 총 4881억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예측·진단기술, 백신·치료제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방역물품·기기 등 신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또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에 신규 투자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차세대 백신 기술 확보부터 유통·저장·관리·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3대 핵심산업인 바이오헬스·미래차·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오후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갈무리

시스템반도체에 대해 전년 대비 9.1% 증가한 2조 4800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의료기기 등 기술 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범부처 대형 R&D를 통해 전주기 지원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AI 등 융합 R&D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차 분야는 친환경차 환경규제 대응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차용 통신·센서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차량·통신·전력용 화합물·AI 반도체와 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투자를 강화한다.

디지털 뉴딜 가속화에도 전년 대비 44.8% 증가한 1조 5400억원을 투자한다. 블록체인 기술, 5G 융합서비스 조 기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AI) 적용·확산을 지원한다. 또 메타버스 기반 실감콘텐츠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공공인프라의 생산성과 안정성 향상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미래기술 확보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2조 2400억원을 지원한다. 185개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자립화와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65개 미래 선도품목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핵심소재 조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7.3% 확대한 2조 5200억원을 투자한다. 또 탄소중립, SW·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인력과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융합인재 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우주, 차세대 ICT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28.0% 증가한 5257억원을 투자한다. 또 양자컴퓨팅·인터넷, 6G 국제표준 선점 및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ICT 분야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에도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조 8900억원을 투자하고, 탄소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CCUS 기술과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9400억원을 투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도 올해 2조 46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미·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반도체, 우주, 양자, 6G 등 국가 전략분야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정부, 신규 규제자유 특구 지정 심의

정밀의료	강원	그린수소	충북
탄소저감 건설소재	충남	스마트 그린물류	경북

1차지정 특구 7곳 안착 지원 규제법령 체계적으로 정비

정부가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그린물류에 대해 규제자유 특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4개 신규 특구 지정에 대한 심의와 오는 8월 끝나는 1차 특구 실증 22개 사업의 임시가 전환·실증특례 연장 방안을 오는 7월 1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12개 지자체가 운송, 에너지, 바이오, 그린수소, 탄소포집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28개 특구사업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 희망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다. 심의위원회에선 그동안 보완된 총 4개의 특구 계획을 심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 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는 상향식 방식과 병행해 중기부에서 전략 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 방식을 통해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다"면서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특구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2019년 7월 당시 1차로 지정된 특구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등 7곳이 대상이다.

1차 특구의 지난 2년간 실증이 올해 8월 종료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7개 특구, 24개 실증사업이 사실상 '졸업'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사업들에 대해선 특구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실증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규제법령 정비까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가로 전환하거나 실증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9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구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특구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종류 사업은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bada@